

<6411지표> 개발 연구

- 요약 -

2026. 5.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는 노회찬재단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노회찬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님을 밝힙니다.

<6411지표> 제안

1. 소득

그렇다면 <6411지표>가 기존 소득분배지표 통계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 단위의 소득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통계는 가구 내에서 합산한 소득을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구직 청년, 동거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 노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포착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기존 통계에서는 성별·연령별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종사상지위, 지역 등 좀 더 다양한 하위집단의 소득 및 빈곤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빈곤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소수집단의 빈곤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표 3-1> 소득 <6411지표> 제안

구분	내용
개인소득/가구소득 구분	- 개인소득: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 단위 소득 - 가구소득: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 단위 소득 - 가구소득 통계치-개인소득 통계치=가구 효과
시장소득/가처분소득 구분	-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전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 가처분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 가처분소득 통계치-시장소득 통계치=공적이전 효과
평균/빈곤율	- 평균: 소득 평균 - 빈곤율: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비율 - 빈곤선: 전체 인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하위집단 구분	- 개인 및 가구주 특성: 성, 연령, 장애, 종사상지위, 지역 등 - 하위집단별 통계치 / 전체 통계치 대비 하위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표 3-1>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 <6411지표>를 설계하였다. 소득 <6411지표> 통계에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분하여 전체 인구나 다양한 하위집단에 대해 소득의 평균 및 빈곤율을 집계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의 질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 결혼, 맞벌이, 출산, 성인 자녀-부모 동거 등과 같은 다양한 가구구성 요인, 각종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에 따른 공적이전 요인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개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 통계치에서 개인소득 통계치를 차감한 값은 가구의 효과를 나타내고, 가처분소득 통계치에서 시장소득 통계치를 차감한 값은 공적이전의 효과를 나타낸다. 참고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인 빈곤선은 2016년 107만원/월에서 2024년 164만원/월로 증가하였다.¹⁾

1) 이하의 모든 분석에서 소득의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다. 시점은 소득 연도로 표시하였다.

개인 성별 분석

이하에서는 소득 <6411지표>를 시산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개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을 구분한 분석 결과로부터 소득 <6411지표> 설계의 의미를 확인한다. <표 3-3>에서는 2024년 개인 성별 소득 평균을 제시하였다. 전체 인구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2,840만원/년,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은 4,720만원/년이었고, 그 차이는 1,880만원/년이었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의 소득 평균을 100이라 할 때 남성과 여성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131%, 69%로 차이가 상당히 컸지만,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103%, 9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가구 효과가 성별 격차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다. 이는 주로 부부 가구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개인시장소득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시장소득이 없거나 적은 여성 배우자가 가구 내에서 남성 배우자의 개인시장소득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공적이전까지 추가적으로 반영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대비 남성과 여성의 평균이 각각 102%, 98%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가구시장소득 격차보다 가구가처분소득 격차가 조금 더 작았으므로, 이는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 제도가 성별 소득격차를 소폭 축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3> 2024년 개인 성별 소득 평균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소득 평균 (만원/년)	전체	2,840	4,720	4,473	1,880	-247
	개인_남성	3,731	4,851	4,570	1,120	-281
	개인_여성	1,951	4,589	4,376	2,638	-213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남성	131	103	102	60	114
	개인_여성	69	97	98	140	86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표 3-4> 2024년 개인 성별 빈곤율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빈곤율 (%)	전체	53.7	20.9	15.3	-32.9	-5.5
	개인_남성	43.7	18.7	13.6	-25.0	-5.1
	개인_여성	63.7	23.0	17.1	-40.7	-5.9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남성	81	90	89	76	93
	개인_여성	119	110	111	124	107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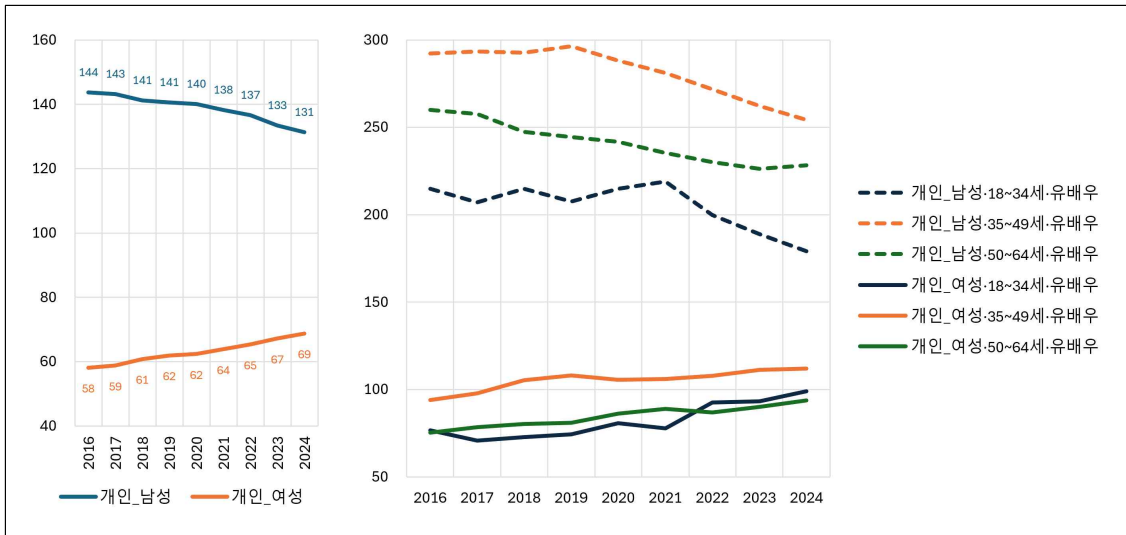
<표 3-4>에서는 성별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전체 인구의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은 53.7%였고,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은 20.9%였다. 즉, 개인이 직접 벌어들인 시장소득이 빈곤선인 1,966만원/년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은 53.7%였지만, 다른 가구원이 벌어들인 시장소득까

지 고려하면 빈곤율이 20.9%로 32.9%p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구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개인이 직접 벌어들인 시장소득이 빈곤선을 넘는 여성은 약 36%에 불과하였지만, 남편을 포함한 다른 가구원의 시장소득까지 고려하면 약 77%의 여성이 빈곤선을 넘는 시장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여성의 빈곤율은 17.1%로 줄어들었다.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역시 남성보다 여성에게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별 소득격차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떨까? <그림 3-2>를 살펴보면, 2016~2024년 동안 개인시장소득의 성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여성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58%였지만, 2024년에는 69%까지 높아졌다. 이는 여성 고용률 증가,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개인이 벌어들인 시장소득의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개인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를 조합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18~64세 근로연령대 유배우 집단의 성별 격차가 특히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증가에 따라 가구 내에서 여성이 육아·가사를, 남성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3-2> 2016~2024년 개인 성별 개인시장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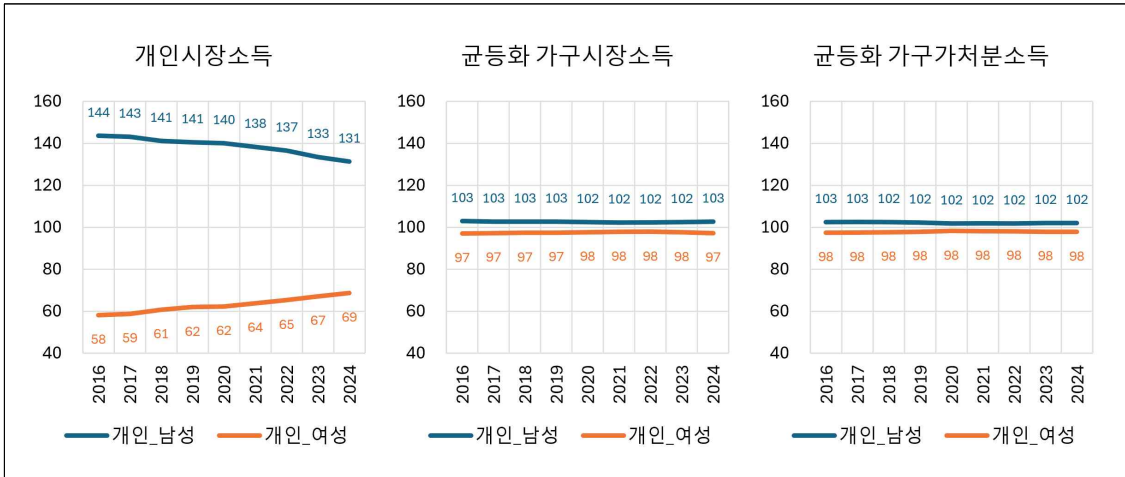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단, <그림 3-3>을 살펴보면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및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의 성별 격차는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 노동시장 격차 축소, 맞벌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개인소득 격차를 축소하지만 가구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3-4>의 빈곤율 분석 결과에서도,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및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성별 격차의 시간에 따른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의 가구소득 격차에는 성별 수

명 격차와 사별 여성 노인의 극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성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같이 사별 여성 노인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2016~2024년 개인 성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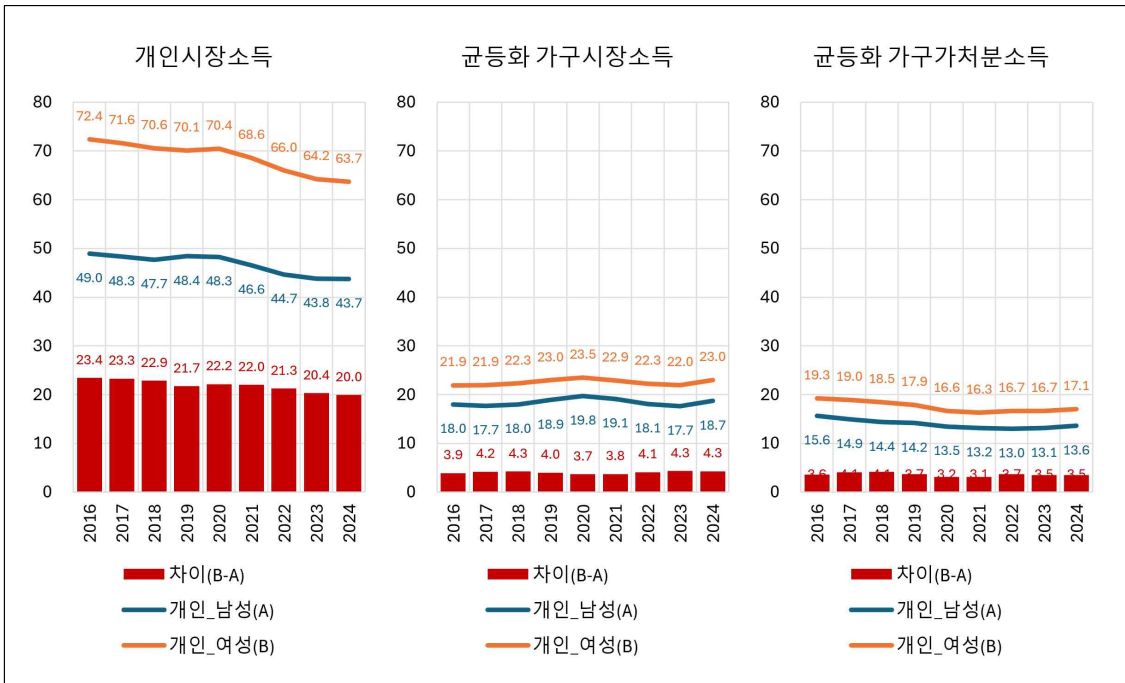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림 3-4> 2016~2024년 개인 성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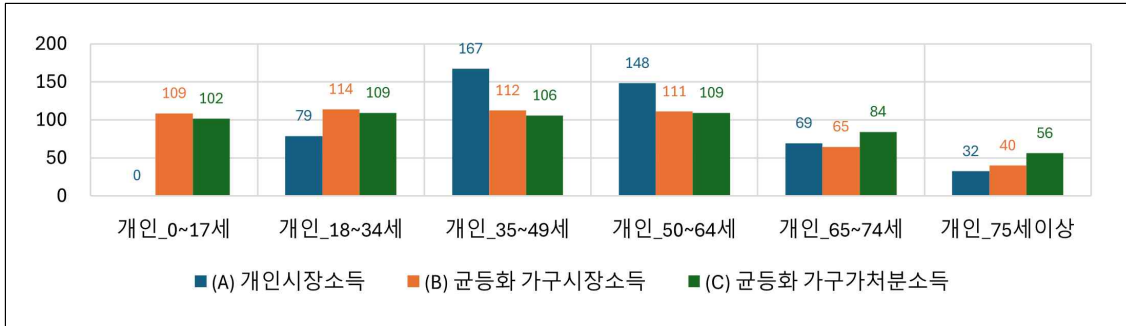
개인 연령대별 분석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개인시장소득의 연령집단 간 격차가 크고, 가구 효과로 인해 아동, 청년, 장년, 중년의 가구시장소득은 거의 유사해지지만 노인의 가구시장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다. 즉, 노인과 근로연령대 자녀의 동거가 노인의 가구시장소득을 근로연령층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편, 공적이전까지 추가로 반영하면 연령-소득 프로파일이 조금 더 평탄해진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은퇴연령층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이전되는 세대 간 재분배 기제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공적이전이 반영된 후에도 노인, 특히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다.

아동과 청년은 개인의 시장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지만, 가구 내 소득 공유를 가정하면 아동, 청년, 장년, 중년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유사해진다. 하지만 가구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공적이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더라도 근로연령층과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 3-5> 2024년 개인 연령대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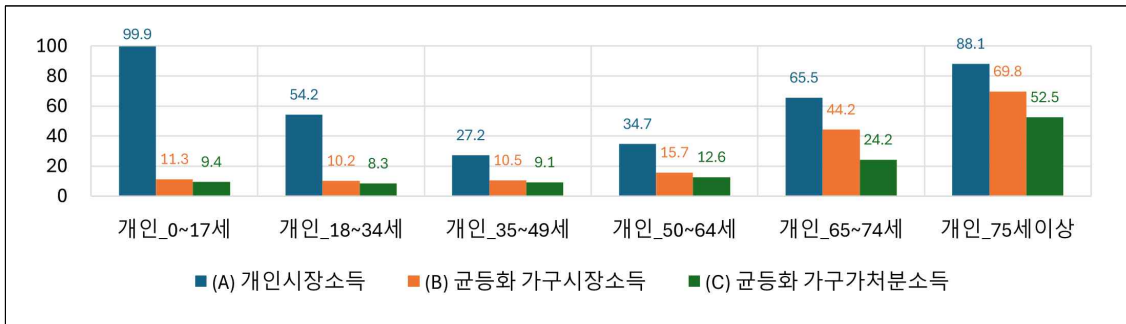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림 3-6> 2024년 개인 연령대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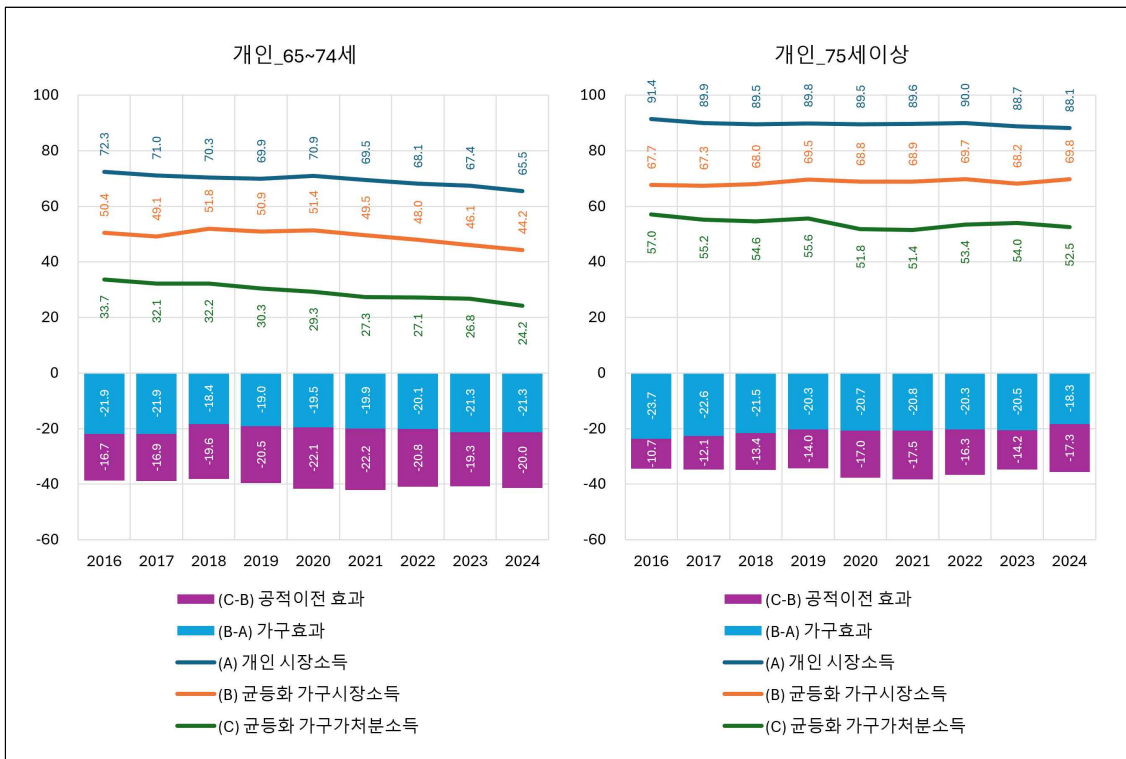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그림 3-9>를 살펴보면, 2016~2024년 동안 개인이 직접 벌어들인 시장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인의 경제활동 증가, 부분적으로 노인의 재산소득 증가에 따라 노인의 개인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74세 저령 노인의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한편, 노인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은 대체로 개인시장소득 빈곤율보다 약 20%p 낮았다. 즉,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의 시장소득이 노인의 빈곤율을 약 20%p 낮춘 것이다. 흥미롭게도,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경우 이와 같은 가구 효과가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양 규범의 약화에 따라 노인과 성인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는 사회적 변화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을 악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성숙,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면서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2016년 57.0%에서 2024년 52.5%로 감소하였다. 공적이전의 확대는 65~74세 저령 노인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2016년 33.7%에서 2024년 24.2%로 감소한 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6411지표>는 노후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국가-시장-가족의 역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3-9> 2016~2024년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 연령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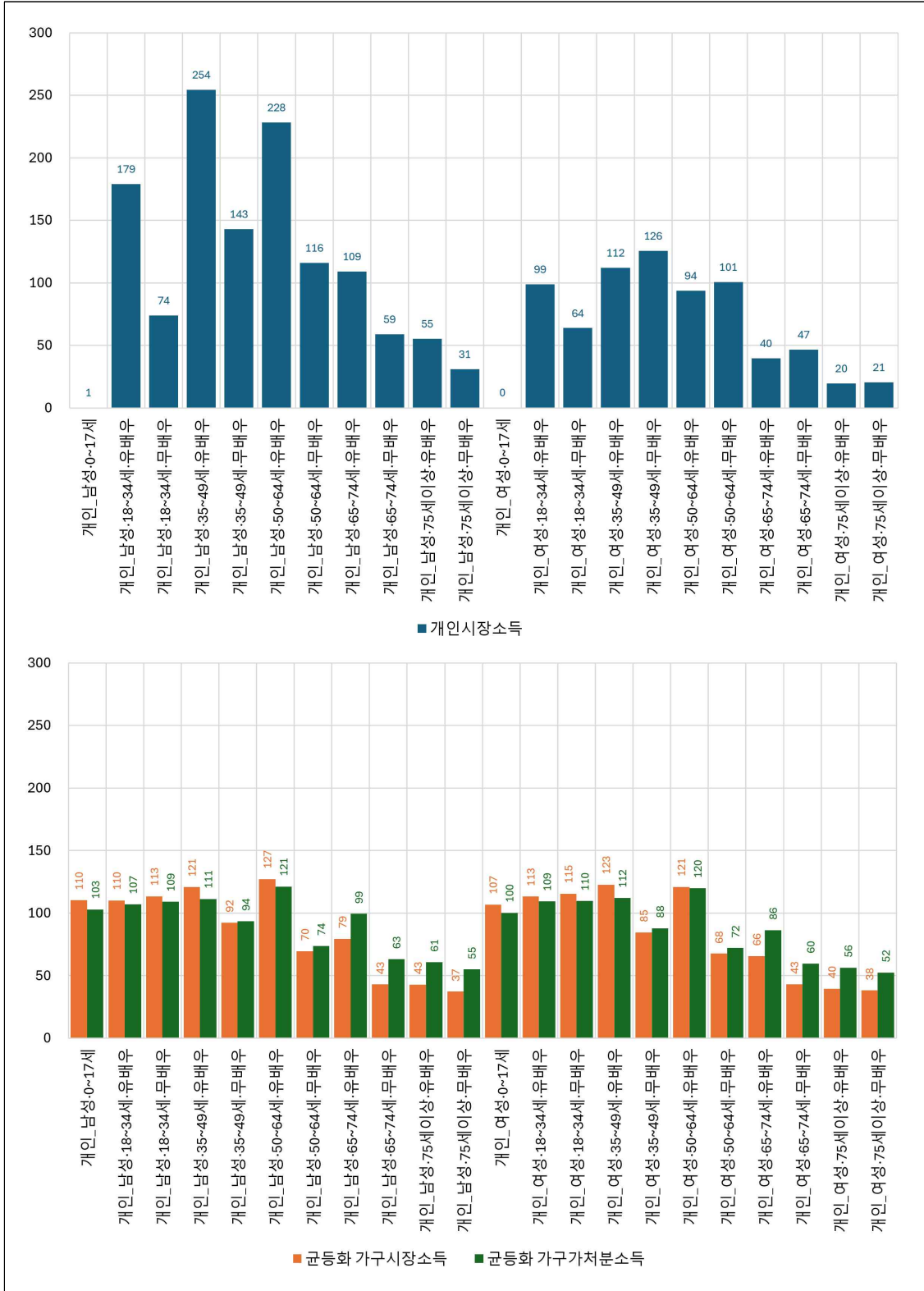
개인 성·연령·결혼상태별 분석

<그림 3-10>에는 성·연령·결혼상태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평균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보고하였다. 그림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동기에서 중장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개인시장소득이 증가하고, 노년기로 이행할 때 퇴직하면서 개인시장소득이 감소한다. 하지만 청장년 집단 내부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른 개인시장소득 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집단이 결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혼의 계층화 현상은 특히 남성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8~34세 남성 중에서 유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179%로 상당히 높았지만, 무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74%에 불과하였다. 35~49세 남성 중에서 유배우 집단과 무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격차도 상당히 컸다. 여성의 경우, 18~34세 청년은 무배우보다 유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수준이 높았지만, 35~49세 장년의 경우 유배우보다 무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기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여성의 결혼 가능성이 높지만, 장년기에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유배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동을 제외하고 개인시장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75세 이상 여성으로, 이들의 개인시장소득은 전체 평균의 20~21%에 불과하였다. 75세 이상 무배우 남성의 개인시장소득 역시 전체 평균의 31%로 상당히 낮았다.

개인시장소득이 아니라 균등화 가구시장소득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과 여성이 부부 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특히 청년기에는 유배우 집단과 무배우 집단의 소득 격차도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기에는 무배우보다 유배우 집단의 가구시장소득 수준이 훨씬 높았는데, 이는 가구 내 소득의 공유가 가구소득 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공적이전은 전반적으로 근로연령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노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구가처분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은 75세 이상 무배우 여성으로 전체 평균의 52% 수준이었지만, 75세 이상 무배우 남성의 가구가처분소득 수준 역시 전체 평균의 55%로 상당히 낮았다.

<그림 3-10> 2024년 개인 성·연령·교육수준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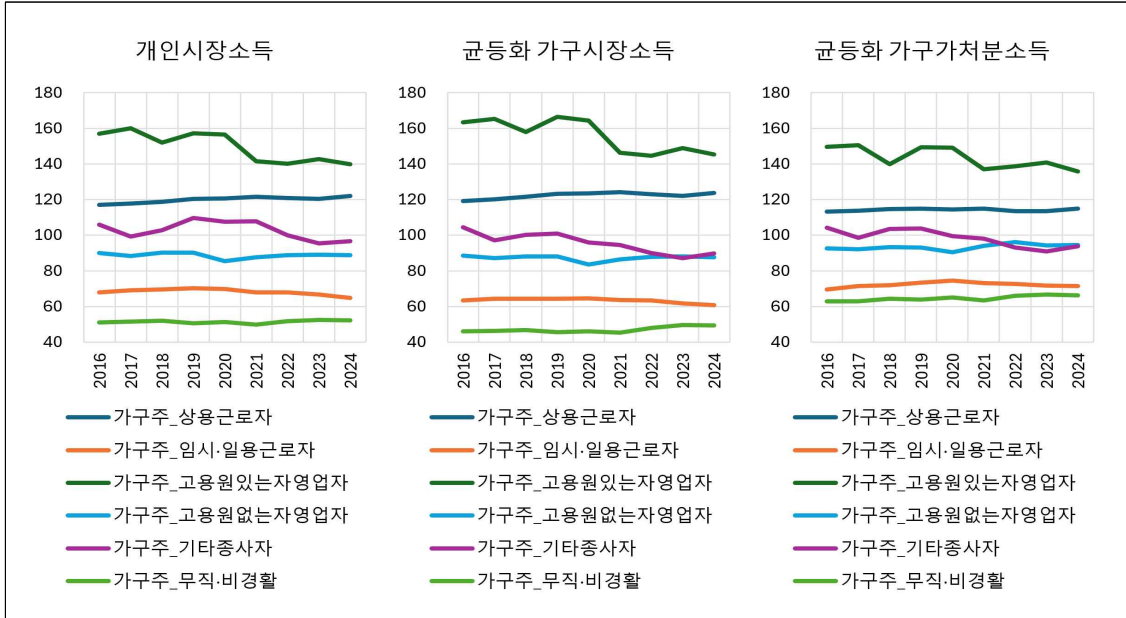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분석

<그림 3-16> 2016~2024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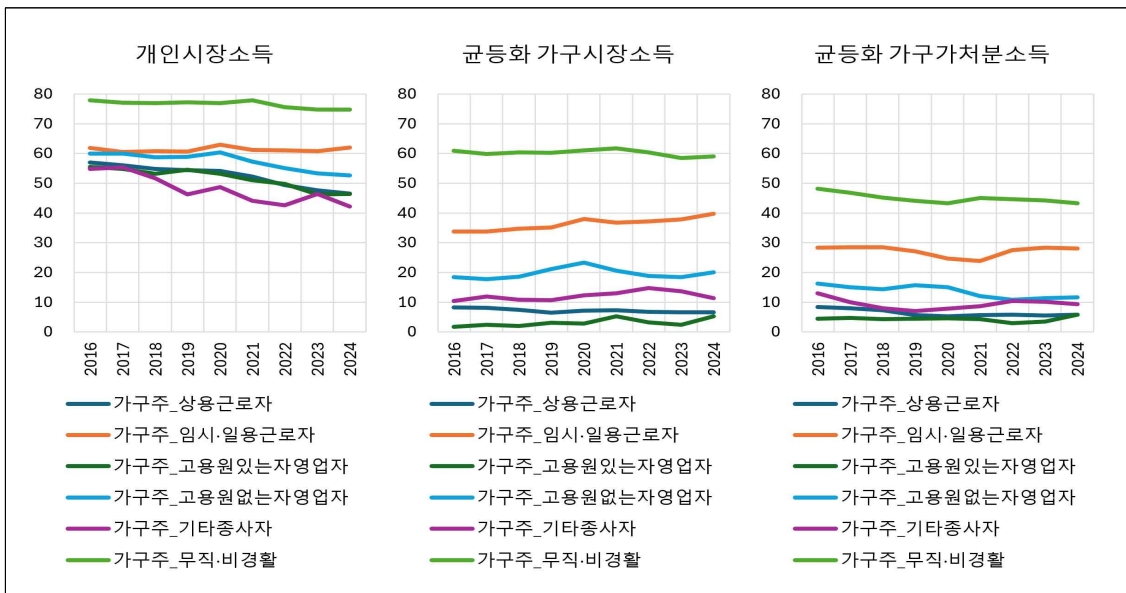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타 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그림 3-17> 2016~2024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기타 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가구주가 무직·비경활인 집단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지만, 특히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인 집단의 가구시장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6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림 3-17>에서는 가구주 임시·일용근로자 집단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관찰된다. 이는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진단할 때 고용이 불안정한 임금근로자의 저소득·빈곤 위험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동시장 지위의 불안정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임시·일용근로자가 근로빈곤 문제의 핵심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가구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가구주 종사상지위 집단 간의 소득·빈곤 순위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소득·빈곤 격차의 크기를 상당히 축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가구주가 무직·비경활,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집단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고용보험 등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 자산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분석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로 감소한 후 2025년 0.625로 다시 증가하였고, 순자산 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7년 41.8%에서 2025년 46.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국가데이터처의 기존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부터 기본적인 자산 불평등 추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 불평등의 원인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유형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체로 한국의 자산 불평등에는 부동산 격차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주식 등 금융자산의 격차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표 3-13>에서 보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을 세분류 수준에서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를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한다. 자산 <6411지표>에서는 저축액/전월세 보증금/부동산/기타 실물자산, 금융부채/임대보증금 수준에서 자산 격차의 실태를 살펴본다. 물론, 필요하다면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개별 변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세부 항목 분석도 가능하다. 앞선 소득 <6411지표>와 달리, 자산 <6411지표>에서는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 자산을 가구 단위로 분석한다.

<표 3-13>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부항목
자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당좌수표 포함)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저축성 보험 또는 만기에 일정금액을 받는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기타저축	빌려준 돈, 임대보증금, 낸 갯돈
		전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자동차	자동차
			기타	자영업자 설비와 재고자산, 건설용과 농어업용 장비, 동물과 식물,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중품, 고가 내구재(현재 시가 300만원 이상), 차량(오토바이, 보트 등), 권리금, 기타(지적재산권 등)
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형태: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주택, 주택 이외 부동산, 예금·적금·보험·펀드·채권, 기타(전세권, 자동차 등)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외상 및 할부	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기타부채	갯돈을 탄 후 낼 금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	
	임대보증금	거주주택 임대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거주주택 이외 임대	거주주택 이외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대	

출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2025v, p. 78,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40300&id=215&act=view&list_no=439535

순자산 분위별 분석

<표 3-14> 2025년 순자산 분위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1분위	479	950	687	357	-3,105	-140	-771
	2분위	1,520	1,892	1,378	511	-2,129	-143	3,029
	3분위	2,973	3,226	4,297	1,036	-3,705	-221	7,606
	4분위	4,057	3,865	9,442	1,420	-5,050	-418	13,317
	5분위	5,543	3,642	15,746	1,829	-5,931	-764	20,067
	6분위	7,192	3,376	23,354	2,605	-7,176	-1,203	28,149
	7분위	8,925	3,508	32,725	2,999	-7,423	-1,655	39,080
	8분위	12,825	3,763	47,571	3,738	-8,276	-2,975	56,645
	9분위	17,468	4,883	73,921	5,140	-9,074	-5,298	87,040
10분위	38,593	8,186	193,728	7,252	-16,071	-14,565	217,122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1분위	5	25	2	13	46	5	-2
	2분위	15	51	3	19	31	5	6
	3분위	30	86	11	39	55	8	16
	4분위	41	104	23	53	74	15	28
	5분위	56	98	39	68	87	28	43
	6분위	72	91	58	97	106	44	60
	7분위	90	94	81	112	109	60	83
	8분위	129	101	118	139	122	109	120
	9분위	175	131	183	191	134	193	185
	10분위	387	219	481	270	237	532	461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1분위	-62	-123	-89	-46	403	18	100
	2분위	50	62	46	17	-70	-5	100
	3분위	39	42	56	14	-49	-3	100
	4분위	30	29	71	11	-38	-3	100
	5분위	28	18	78	9	-30	-4	100
	6분위	26	12	83	9	-25	-4	100
	7분위	23	9	84	8	-19	-4	100
	8분위	23	7	84	7	-15	-5	100
	9분위	20	6	85	6	-10	-6	100
10분위	18	4	89	3	-7	-7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이처럼 자산 프로파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불평등에도 부동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의 부동산 평균을 100%라 할 때 순자산 1분위의 부동산 평균은 2%에 불과한 반면 순자산 10분위의 부동산 평균은 481%로 매우 컸다. 즉, 순자산 1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순자산 10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거의 5배에 달하였다. 물론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기타 실물자산 항목에서도 저분위-고분위 격차가 관찰되었지만, 그 격차의 크기는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패턴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순자산 2분위는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였지만, 순자산 10분위는 89%였다. 즉, 고자산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순자산 1분위는 부동산이 687만원에 불과하였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3-16> 2025년 개별 자산 항목이 순자산 분위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해당 항목 차감 순자산 평균 (만원)	전체	37,183	43,414	6,845	44,454	53,938	49,883
	1분위	-1,250	-1,721	-1,458	-1,128	2,334	-631
	2분위	1,508	1,137	1,651	2,518	5,158	3,172
	3분위	4,633	4,381	3,309	6,570	11,311	7,828
	4분위	9,260	9,452	3,875	11,897	18,367	13,735
	5분위	14,523	16,425	4,320	18,237	25,997	20,830
	6분위	20,956	24,773	4,795	25,543	35,325	29,352
	7분위	30,155	35,571	6,354	36,080	46,503	40,735
	8분위	43,820	52,882	9,074	52,907	64,921	59,620
	9분위	69,572	82,157	13,119	81,900	96,114	92,338
10분위	178,530	208,937	23,394	209,870	233,194	231,687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1분위	-3	-4	-21	-3	4	-1
	2분위	4	3	24	6	10	6
	3분위	12	10	48	15	21	16
	4분위	25	22	57	27	34	28
	5분위	39	38	63	41	48	42
	6분위	56	57	70	57	65	59
	7분위	81	82	93	81	86	82
	8분위	118	122	133	119	120	120
	9분위	187	189	192	184	178	185
	10분위	480	481	342	472	432	464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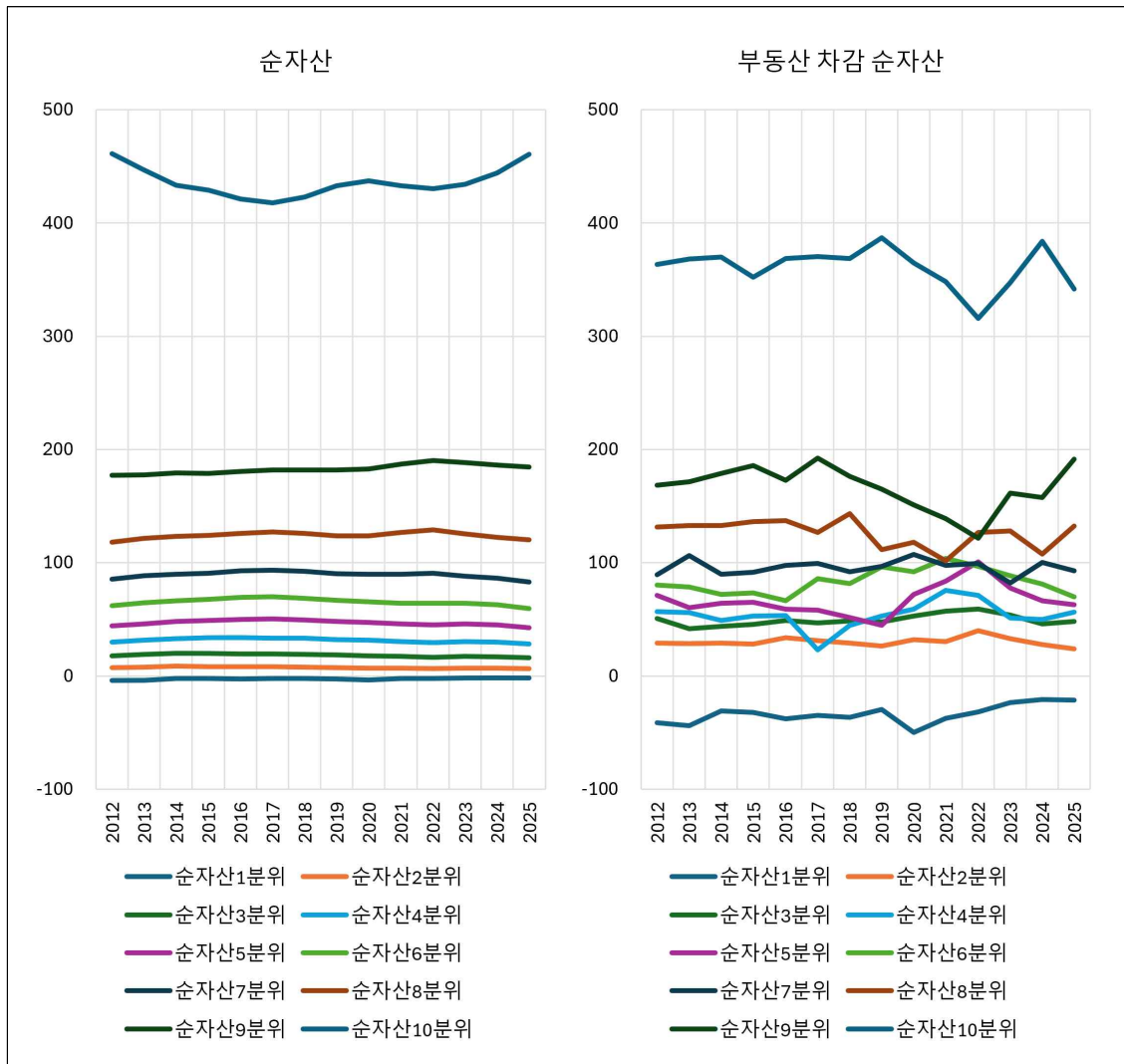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순자산 10분위는 전체 순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3-16>에는 부동산, 저축액 등 개별 자산 항목이 순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여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2025년 순자산 10분위 집단의 순자산 평균은 217,122만원이었는데(<표 3-14>), 그중에서 부동산 평균이 193,728만원이었으므로(<표 3-14>),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의 평균은 23,394만원으로 계산되었다(<표 3-16>).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순자산은 10분위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481%였지만(<표 3-14>),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은 10분위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342%에 머물렀다. 즉, 10분위 집단의 순자산이 전체의 약 5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데는 부동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저축액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더라도 10분위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48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축액 유무가 10분위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지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의 분위 간 격차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그림 3-21>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은 전체 평균 대비 10분위 평균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였지만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10분위 평균의 비율이 2017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한 것과 달리, 부동산을 제외하면 순자산의 분위 간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1분위 평균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고자산층-저자산층 순자산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 2012~2025년 분위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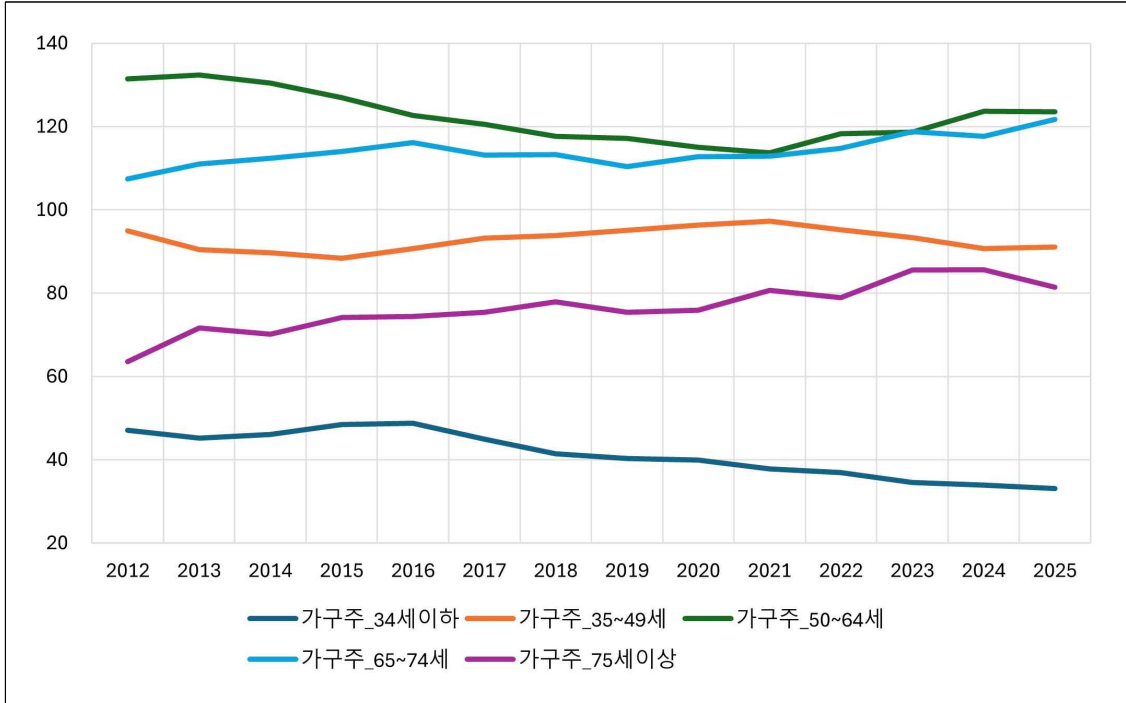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순자산 10분위는 전체 순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연령대별 분석

<그림 3-23> 2012~2025년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실태를 살펴본다. 2025년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는 순자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33%에 불과하였다. 청년 가구주 집단은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순자산 평균의 40%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가구를 형성한 청년의 임차 가구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월세 보증금 및 저축액 비중이 감소하였고 부동산 비중이 증가하였다. 35~49세 장년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91%였고, 50~64세 중년 가구주와 65~74세 저령 노인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122~124%로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 고령 노인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81%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에서 50~60대까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70대 이후에는 은퇴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한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순자산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청년의 입직 및 독립 지연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자산형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분석

<표 3-19> 2025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가구주_상용근로자	11,956	5,491	42,294	2,178	-8,494	-3,510	49,915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4,673	1,773	19,840	898	-2,664	-971	23,550
	가구주_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8,390	4,493	83,327	12,400	-19,426	-4,603	94,582
	가구주_고용원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8,906	2,172	43,509	5,544	-7,453	-2,177	50,501
	가구주_기타종사자	6,430	3,988	20,950	1,764	-6,134	-1,705	25,293
	가구주_무직·비경활	7,830	1,968	37,317	843	-2,457	-2,136	43,365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가구주_상용근로자	120	147	105	81	125	128	106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47	48	49	33	39	35	50
	가구주_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85	120	207	461	286	168	201
	가구주_고용원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89	58	108	206	110	79	107
	가구주_기타종사자	65	107	52	66	90	62	54
	가구주_무직·비경활	79	53	93	31	36	78	92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가구주_상용근로자		24	11	85	4	-17	-7	100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20	8	84	4	-11	-4	100
가구주_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9	5	88	13	-21	-5	100
가구주_고용원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18	4	86	11	-15	-4	100
가구주_기타종사자		25	16	83	7	-24	-7	100
가구주_무직·비경활		18	5	86	2	-6	-5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표 3-19>에는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실태를 보고하였다. 2025년 순자산이 가장 많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주로, 이들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201%였다.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직·비경활 가구주는 대체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순자산을 가졌고,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종사자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50~54%로 가장 작았다. 이는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지위뿐만 아니라 자산 지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등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은 근로소득 수준이 낮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자산 실태 역시 취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 분석

<표 3-20>에는 지역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순자산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서울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151%였다. 인천·경기의 순자산 평균 역시 전체 평균의 10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지역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75~79%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은 부동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152%로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저축액 평균 역시 전체 평균의 117%로 큰 편이었다. 이는 서울-지방 자산 격차가 부동산 격차뿐만 아니라 주식 등 금융 자산의 격차를 포괄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3-20> 2025년 지역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서울	11,604	9,039	61,409	1,597	-7,268	-5,094	71,288
	인천·경기	10,223	3,992	46,359	2,637	-8,443	-3,489	51,280
	대구·경북·강원	9,465	1,375	27,620	3,218	-5,113	-1,218	35,348
	광주·전북·전남·제주	8,940	1,366	27,988	3,214	-5,147	-1,223	35,137
	부산·울산·경남	8,744	1,723	29,385	2,799	-5,836	-1,421	35,394
	대전·세종·충북·충남	9,730	1,980	30,302	3,359	-6,379	-1,825	37,167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서울	117	242	152	59	107	186	151
	인천·경기	103	107	115	98	124	127	109
	대구·경북·강원	95	37	69	120	75	44	75
	광주·전북·전남·제주	90	37	69	120	76	45	75
	부산·울산·경남	88	46	73	104	86	52	75
	대전·세종·충북·충남	98	53	75	125	94	67	79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서울	16	13	86	2	-10	-7	100
	인천·경기	20	8	90	5	-16	-7	100
	대구·경북·강원	27	4	78	9	-14	-3	100
	광주·전북·전남·제주	25	4	80	9	-15	-3	100
	부산·울산·경남	25	5	83	8	-16	-4	100
	대전·세종·충북·충남	26	5	82	9	-17	-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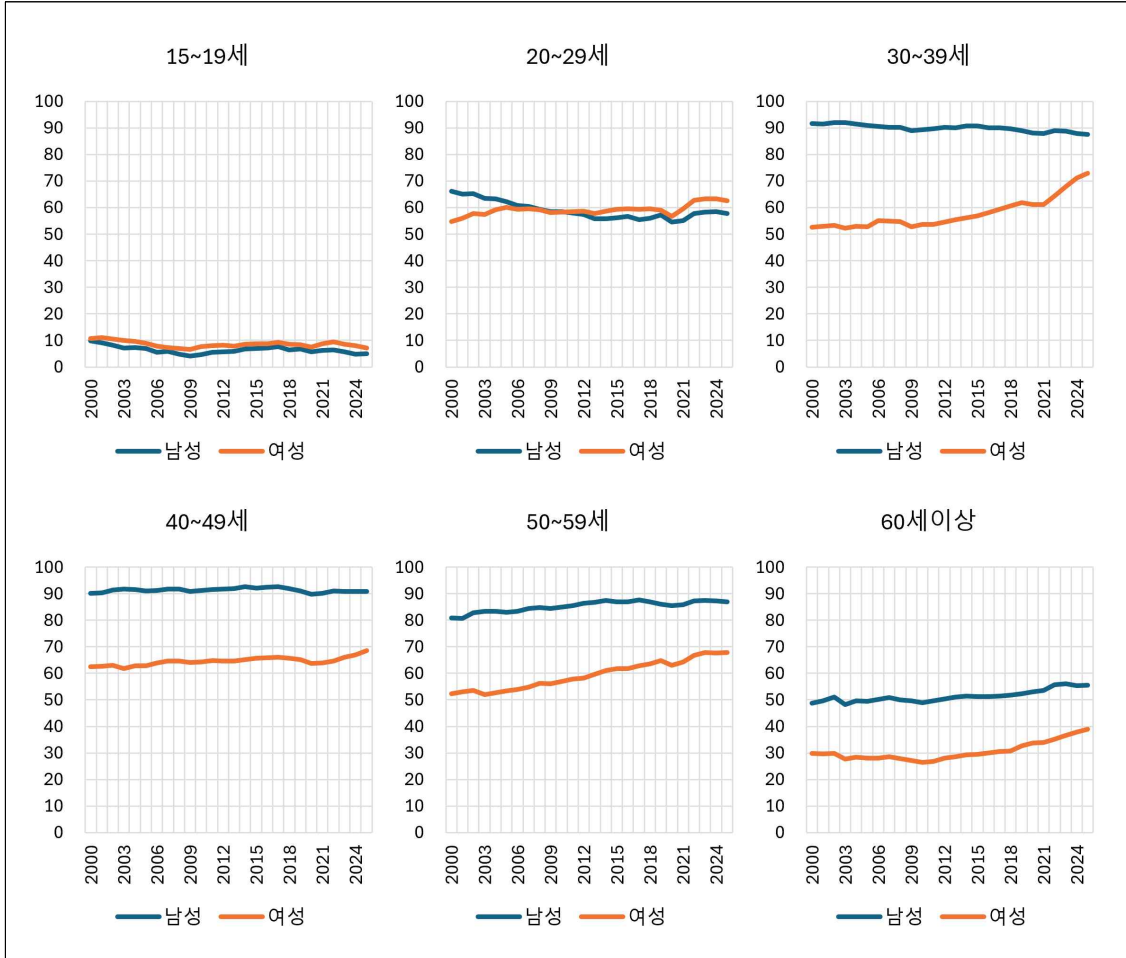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3. 고용 및 임금

<그림 3-28> 2000~2025년 성·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출처: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c, 국가데이터처.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고용),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임금 등)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 2장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한 성별 고용률과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았다(<그림 2-1>, <표 2-2>). <그림 3-28>에는 추가적으로 성별과 연령을 조합하여 구성한 하위집단별 고용률을 보고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중고령자와 여성의 고용률 상승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결과, 30대의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비혼·만혼 증가, 맞벌이 확산 등에 따라 청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20대 및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대학 진학을 증가, 입직 연령 상승 등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50대 이상 남성의 고용률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장년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훨씬 높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림 3-29> 2003~2025년 8월 성·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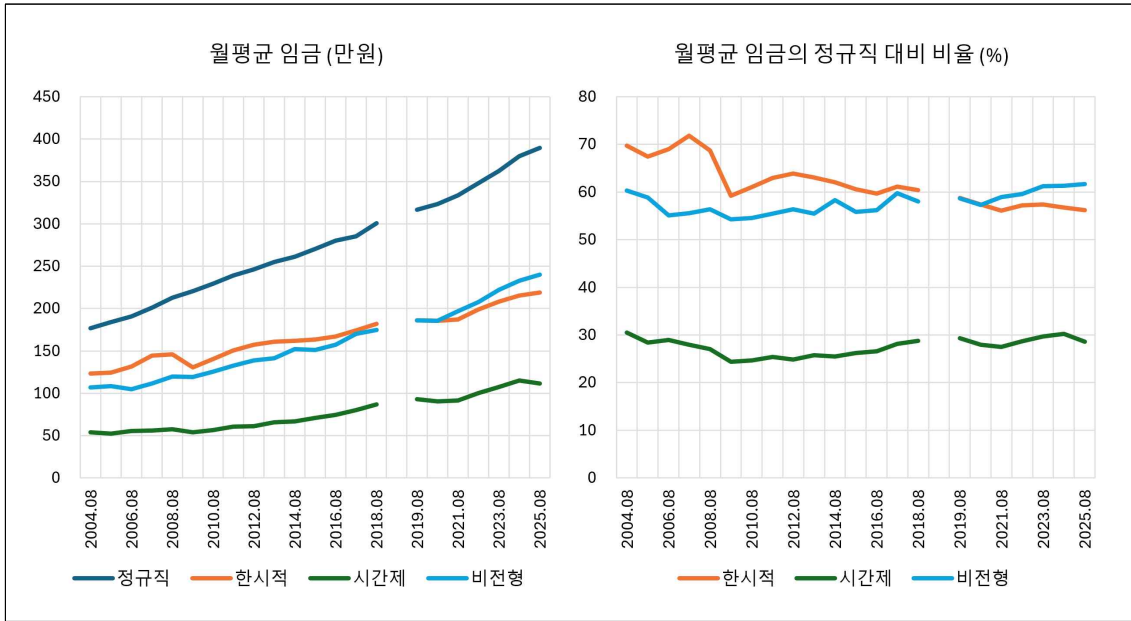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d, 국가데이터처.

그렇다면 취업한 집단의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근로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29>를 살펴보면, 대체로 30대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20대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상에서는 대체로 시간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20대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에서 보듯이, 20대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주된 영향을 미쳤고,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도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림 3-32>에서 보듯이, 30대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에는 비전형 근로자 비율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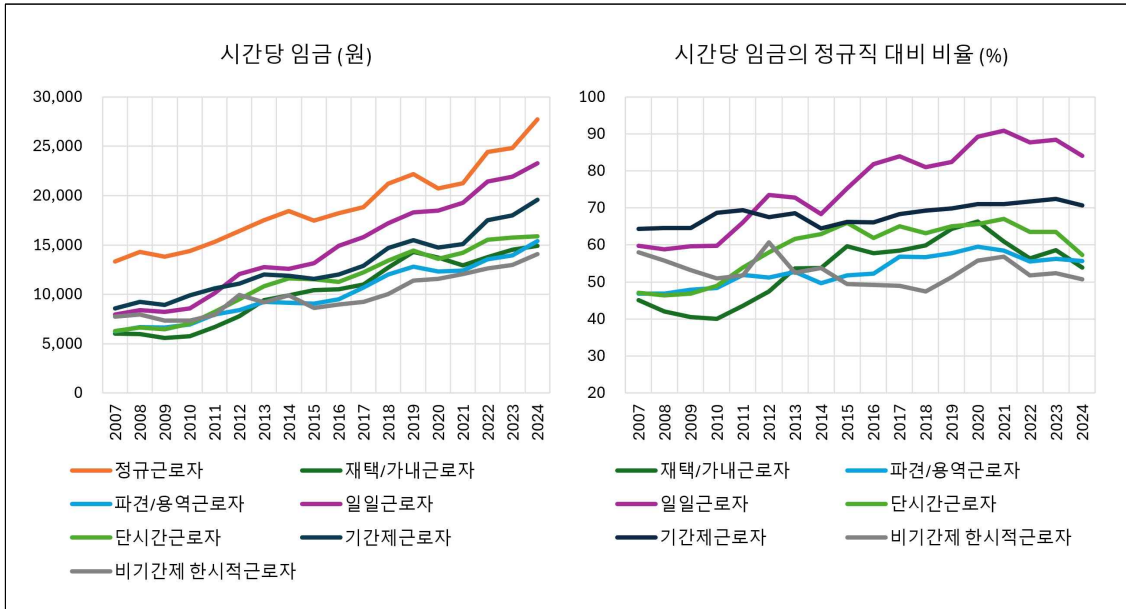
<그림 3-33> 2004~2025년 8월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출처: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증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e,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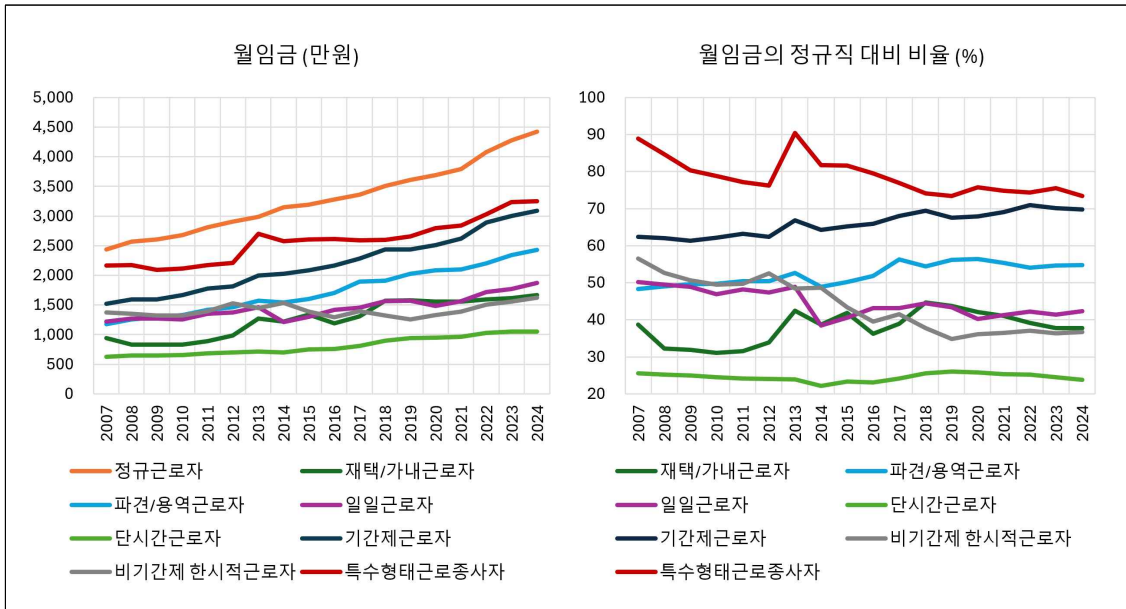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림 3-33>에서 보듯이, 2025년 8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56%, 29%, 62%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에는 짧은 근로시간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0년대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한시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수준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림 3-34> 2007~2024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임금총액



출처: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 2026f, 국가데이터처.

<그림 3-35> 2007~2024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



출처: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 2026f, 국가데이터처.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34>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보고하였다.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그림 3-35>에서 근로시간을 고려한 월임금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일근로자,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대비 월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소득 및 자산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6411지표>를 제안하고 시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기존 주요 통계들을 살펴본 결과, 고용, 임금,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의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일관된 방향으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지난 이십여년 간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어왔고, 주 52시간제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도 감소하였으며, 최근 십여년 간 일자리 만족도도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0년대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인 빈곤율도 2011년 46.5%에서 2024년 35.9%로 크게 감소하였다.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 역시 대체로 증가하였다. 단, 여전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산 불평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였지만 2017년부터 최근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 부채 비율은 OECD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여 가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201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불평등의 증가가 국민들의 체감 분배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6411지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대표하는 소득분배지표를 중심으로 소득 <6411지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분석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국가가 저소득·빈곤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게 충분한 공적이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소득 <6411지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이에서 가구 효과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에서 공적이전 효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국가-시장-가족이 어떻게 소득분배를 결정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다양한 하위집단별 분석을 통해 저소득·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 고용률 증가,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개인시장 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맞벌이 증가에 따라 가구 내에서 여성이 육아·가사를, 남성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74세 저령 노인의 빈곤율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지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노인의 고용률 증가, 재산소득 증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 규범의 약화에 따른 노인-성인 자녀 동거 감소가 노인 빈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노인이 가장 빈곤하였고, 이들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의 빈곤율이 감소하는 시기에 오히려 증가하였

다. 한편,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집단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의 계층화 현상도 관찰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빈곤 위험이 상당히 컸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동시장 지위의 불안정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임시·일용근로자가 근로빈곤 문제의 핵심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산 영역에서는 자산 불평등의 원인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자산 1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순자산 10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거의 5배에 달하였고,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패턴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고자산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은 자산 불평등이 증가한 2017~2025년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자산 프로파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불평등에도 부동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가구주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에서 50~60대까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70대 이후에는 은퇴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순자산 지위는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청년의 입직 및 독립 지연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자산형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분석 결과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종사자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50~54%로 가장 작게 나타나,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지위뿐만 아니라 자산 지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역별 분석 결과,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가 뚜렷하였고 이와 같은 격차가 시간에 따라 대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불평등 증가 추세의 핵심이 취약계층과 중간계층 간의 자산 격차 확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고자산층으로의 자산 집중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임금 영역에서는 기존 통계가 매우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기보다는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는 기존 집계치를 활용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에 따르면, 중고령자와 여성의 고용률 상승 추세가 뚜렷하였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30대의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비혼·만혼 증가, 맞벌이 확산 등에 따라 청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20대 및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대학 진학을 증가, 입직 연령 상승 등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청장년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훨씬 높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20대 이하에서는 고용률과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3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았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여성의 한시적/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분석하지 못한 통계가 많다. 지역, 세부 연령집단, 가구 구성, 주거 및 재산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개인소득-가구소득,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자

산-부채, 고용, 임금 등의 실태를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볼 수 있다. 성, 연령, 종사상지위 등을 교차하여 비취업 남성 청년과 같은 구체적인 하위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분석이 복잡할수록 지표로서의 안정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및 재산 정보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지만, 경제활동 및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는 중요한 한계를 갖는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경제활동 관련 데이터는 일자리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근로소득과 가구가처분소득의 관계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임금, 근로형태, 사회보험 가입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특성에서부터 가구가처분소득에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조사 데이터 자체의 한계는 다양한 조사의 개발, 행정자료의 활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